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47
----------	-----

제출연월일 : 2009. 2.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친환경·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사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나. 공사의 사업을 일부 조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9. 1. 9. ~ 1. 2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기업법」”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전도시공사”로 한다.

제2조중 “공사”를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업업무)”를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업무를 행한다”를 “사업을 수행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업무”를 “사업”으로, “업무를”을 “사업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3조제2항중 “법”을 각각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도시공사로 본다.

②제1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재 파쇄장 위탁대행사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을 “대전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대전도시공사”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대전도시공사”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공복리사업 등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 - 「대전도시공사」----- ----- ----- ----- -----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제19조(사업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5. ~ 6. (생략)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 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 8. ~ 13. (생략) 14. 도시가스사업 15. ~ 18. (생략)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 ①----- ----- 사업을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일반산업단지 ----- 5.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5. ~ 18.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 ---사업을----- ----- -----

현행	개정안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u>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 2. (생략) ② (생략)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u>「지방공기업법」</u>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생략) 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u>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u> ③ ~ ④ (생략)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방공기업법」</u> ----- ----- -- <u>「지방공기업법」</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공무원의 파견) ① <u>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u>	<u>〈삭제〉</u>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第2條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경영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第3章 및 第4章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水道事業(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工業用水道事業
3. 軌道事業(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自動車運送事業
5. 地方道路事業(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下水道事業
7. 住宅事業
8. 土地開發事業
9. 삭제 <2005.7.13>

②地方自治團體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經常經費의 5割 이상을 經常收入으로 充당할 수 있는 사업을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民間人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住民福利의 增進에 기여할 수 있고, 地域經濟의 活性化나 地域開發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야 한다.

第71條 (代行事業의 費用負擔) ①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條例로 정한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폐기물관리법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2. "知識産業"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研究開發業·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 知識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 2의2. "文化産業"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文化産業을 말한다.
3. "情報通信産業"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資源備蓄施設"이라 함은 石炭·石油·原子力·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貯藏·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5. "産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土地로서 다음 各目的의 것을 말한다.

- 가. 國家産業團地 : 國家基幹産業·尖端科學技術産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 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地域을 産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農工團地: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産業을 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